

# 세법학 최근 기출문제 유형

최근 세법학의 출제경향은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여 서술하는 이론형 문제 뿐만 아니라 조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단순사례형 문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 세무회계 요소를 바탕으로 한 사례형 문제 그리고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견해형 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조문에 대해 알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세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관련 조문 등을 접목시켜 사례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등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매년 출제경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제경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하에서는 최근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이론형 문제

### (1) 조문 중심형

단순히 법령을 물어보는 문제유형으로서 비교적 주요 논제를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도 꾸준히 출제하고 있다. 또한 조문 내용을 단순히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2년(22년과 23년) 동안만 고려한다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서 최근 기출문제 중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6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 (22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4년 기출,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환급의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기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설명하시오.

(19년 기출,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취지, 감면요건, 감면내용, 사후관리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 감면요건, 감면내용, 사후관리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 (2) 순수 이론형 문제

법령 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서 순수 이론 부분을 물어보는 유형이다. 제도의 장단점 또는 조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도입배경 등이 주로 출제된다. 다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며, 드물게 출제된다.

(14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고, 공제법에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Account method)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교설명하시오.

(19년 기출,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에 의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한 논쟁사항을 설명하시오.

(20년 기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개념 및 구별 실익을 설명하시오.

(22년 기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과세방식과 취득과세방식이 거론된다. 두 방식의 각각의 장점과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 2. 사례형 문제

### (1) 단순사례형

대법원 판례가 아닌 단순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와 관련된 법령을 물어보거나, 관련 법령을

서술한 후 해당 사례에서의 사례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이다.

### 1) 법령을 위주로 물어보는 유형

사례가 제시되지만, 해당 사례와 관련된 법령만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서 이론형 문제와 유사한 문제 유형이다.

#### (19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丙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제도의 ① 취지, ② 공제요건, ③ 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④ 일부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3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乙이 이행하여야 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를 서술하시오.

#### (16년 기출, 조세특례제한법)

<사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인 A회사는 회사의 기술혁신에 우수인력인 甲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상대로 영입조건을 협상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제안하였다. 이에 甲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더라도 그 행사에 따른 소득세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절세대책에 관하여 문의해왔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그 행사이익의 범위와 납부특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위 <사례>에서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내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 사례판단까지 결합된 유형

사례를 제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례 적용까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다.

#### (19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甲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를 고민 중이다.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따라 임차

인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2년 기출, 소득세법)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사례>

甲과 乙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1994.3.2. 혼인하였다. 甲은 배우자 乙소유의 토지(취득가액 3천만원)를 2009.3.2. 증여(토지의 시가는 1억원)받은 후, 2012.4.2. 주식회사 A에게 시가상당액인 6억원에 양도하였다. (단, 해당 토지는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유일한 재산임)

물음 1) 甲과 乙이 2012.4.2.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논하십시오.

물음 2) 甲이 2012.4.2. 현재 乙과 이혼한 상태인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설명하십시오.

물음 3) 乙이 2012.3.2.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설명하십시오.

(15년 기출, 법인세법)

<사례>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주당 액면가액 2억 원, 주당 발행가액 3억 원, 자본금 200억 원)인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는 2010년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전부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자본전입 당시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A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를 A에게 무상교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주자인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 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았다. 그 후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속된 실적부진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B는 A에 대한 채권을 전부 A의 주식(주당 액면가액 2억 원, 주당 시가 3억 원, 주당 발행가액 5억 원)으로 출자전환하였다. A는 이로 인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를 현재까지 공제되지 않은 2000년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A가 자본전입한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계산하고, ② 동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③ 동 주식발행액면초

과액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해 의제배당액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물음 2) 위 <사례>에서 B의 출자전환으로 A에게 발생한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고, ② A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③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가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를 2000년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물음 3) 위 <사례>에서 B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A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B와 체결한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설명하시오.

## (2) 세무회계형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나, 사례를 주고 해당 사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포함한 과세문제 등을 물어보는 유형이다. 이런 세무회계형 문제에서는 계산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도 있다.

### (11년 기출, 법인세법)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A법인(발행주식총수 2,000주, 주당액면가액 10,000원)은 비상장영리내국법인이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A법인의 주주는 영리내국법인인 B법인과 C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법인과 C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B법인과 C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은 각각 1,000주(각 지분비율 50%에 해당)이며, B법인의 주당 취득가액은 7,000원이고 C법인의 주당 취득가액은 12,000원이다. A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을 액면발행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자본금의 변동과 차입금이 전혀 없다. 2011년 6월 1일 A법인은 B법인의 보유주식 중 20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그 대가로 소각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인 주당 15,000원보다 낮은 주당 9,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고, A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주식소각 전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소각 외의 보유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물음 1) 2011년 6월 1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각 법인에게 귀속되는 세무상 효과(세무조정 포함)를 설명하시오.

- 1) A법인            2) B법인            3) C법인

물음 2) 2011년 7월 20일 A법인이 주식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전액 자본전입하는 경우 B법인과 C법인의 세무상 효과(세무조정 포함)를 설명하시오.

### (3) 판례형

대법원 판례 중 주요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례형 문제로 출제하여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물어보는 유형이다. 사례형 문제 중 사실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 (13년 기출, 부가가치세법)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특정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A는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특정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에 기재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 주식회사 A가 한 안분계산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 (19년 기출, 국세기본법)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2011년 10월경 A주식회사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乙에게 甲 소유의 B주식회사(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만 정하여 준 채 매도가격, 매도상대방, 매도시점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1년 11월경 甲 소유의 B주식회사 주식 50만 주를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주식 50만주의 매도과정에서 C주식회사의 과장 丙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 다음, 위 주식 50만주를 丙이 내세운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매도하였다가 D주식회사가 다시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단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乙은 2011년 12월 15일에 C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00억원을 지급받은 후 80억원과의 차액 20억원을 자신이 취하여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하였는바, 그 무렵 다른 채권자들과의 민사재판 결과에 따르면 乙은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지시받고는 2012년 2월경 甲과 D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

약서를 기초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위 주식을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은 신고내용의 탈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5월 4일 甲에게 그 차액 20억원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이고, A, B, C, D는 모두 내국법인으로 전제하며, 가산세는 논외로 함)

- 물음 1) 위 처분 중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甲이 위 증권거래세 증액경정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단, 이 <사례>에서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년 3월 1일이라고 전제한다.)
- 물음 2)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 乙이 취한 양도대금 차액 20억원이 甲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기출, 법인세법)

<사례>

주식회사 A는 2005년 3월 5일 X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A는 건설교통부장관과 2005년 10월 5일 X고속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되, 30년 간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추정통행료 수입의 최소 90%를 보장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X고속도로를 건설하여 2007년 12월 23일 B가 보유한 A발행주식 가액 중 50억원을 유상감자하였다. 이후 A는 2008년 1월 1일 유상감자한 금액을 20년 만기, 공정금리 연 20%의 이자를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약정을 체결하였다. A의 자본구조 변경 후 B의 주식 지분율은 60%였으며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0%로 낮추어 A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 절감 등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A와 B의 후순위차입약정을 2007년 12월 20일 승인하였다.

A는 2017년 12월 31일 B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비용 10억원을 법인세 각 사업 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A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거래가 경

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년 8월 10일 법인세를 증액정정하였다.

(단, 2017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5%, 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2%이고, 해당 차입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A가 B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이자율 또는 B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이자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물음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과 판례상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물음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① 일반적인 시가의 기준 및 산정 방법과 ② 시가 입증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물음 3)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시된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에 있어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십시오.

물음 4)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단, 계산과정은 불필요하다.)

#### (19년 기출, 소득세법)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사례 1>

거주자 甲은 내국법인 A주식회사에서 1998년경부터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거주자 乙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甲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乙 및 乙의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乙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甲은 乙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乙로부터 A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에 70억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

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甲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사례 2>

거주자 丙과 거주자 丁은 2004년경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국내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국제금융불안과  
국내경기 부진으로 2016년 2월 27일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丙과 丁은 동업관  
계 청산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  
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에 따라 丙이 丁으로부터 청산  
의 대가로 15억원을 지급받되, 丙은 홍콩 관련 고객들이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丁은 나머지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각자  
가 소지하고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위 15억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패턴의 공유의무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丙은 이 합의에 따라 丁으로부터 2016년 10월 15일 현금 15억원을 지급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이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물음 1)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물음 2) <사례 1>과 <사례 2>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각 판단 및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세법학 답안작성요령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세법학 답안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래도 주관식 문제이고, 서술형 문제이다 보니 자신의 아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학 답안작성방식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부터 '지식 정도가 깊다'라는 느낌, 즉 많이 알고 있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잘 정리된 상태로 시험장에 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법학 문제 대표 유형을 바탕으로 답안작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목적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다.

## I.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제되기 시작해 그 출제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접근과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법을 단순히 암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해위주로 공부하고 많은 사례형 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응용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 1. 사례형 문제의 기본답안작성요령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p$ 이면  $q$ 이다( $p \rightarrow q$ ).
- ②  $a$ 는  $p$ 에 속한다( $a \in p$ ).
- ③ 따라서  $a$ 는  $q$ 이다( $a \rightarrow q$ ).

법이란  $p$ 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q$ 라는 법률효과가 생김을 정하는 것이다(①).  $a$ 라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p$ 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면(②),  $a$ 라는 사실에 대하여  $q$ 라는 법률효과를 준다(③). 다시 말해서 어떤 법률요건을 해석하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여 그 사실이 그 법률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조세법에 적용하면,

- ① ‘조세법에서는 X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해당 사례에 있어 X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에서

- ①은 법률의 해석문제에 해당하고,
- ②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문제에 해당하며
- ③은 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

즉, 사례형 문제는 우선 법적근거 및 판례를 서술하고, 사례에서의 사실관계를 인식한 후 과세여부(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연습지나 문제지에 간단히 개요를 짰 후 차분히 답안을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 (1) 법적근거와 판례의 태도

위에서 언급한 조세법에 있는 ‘X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규정을 서술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사례형 문제인 만큼 법적근거는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즉, 사례형 문제인 만큼 사례와 관련 없는 법령을 서술하는 것은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법령을 서술하는 것보다는 사례에서 물어보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령을 서술해야 한다.

결국,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이라면 해당 사례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이 좋은 답안이 된다.

### (2) 사례 적용

이것은 3단 논법에서 판단의 문제이다. 또한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위 (1)에서의 법적근거 또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 된다. 또한 결론은 되도록 복문이나 중문의 형식이 아닌 단문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 2. 답안작성 예시

### (1) 단독 사례형 문제

물음에서 관련 법령과 사례 적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사례>

- (1) 과세관청은 2024.1.9.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거주자 甲에게 발송하였다.
- (2) 甲이 거주하는 유토피아아파트의 경비원인 乙이 2024.1.12.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3) 위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甲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등기우편 등의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물음 1) <사례>에서 경비원 乙에게 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물음 1)
Ⅰ. 쟁점
사례의 경우 경비원 乙에게 甲이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Ⅱ. 관련 법령(보충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Ⅲ.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납세자의 지배권 범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수임인의 범위는 반드시 위임

	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IV. 사례 적용
	(1) 판례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인 甲이 경비원인 乙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V. 결어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이런 단독사례형 문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사례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가 서술된 후 해당 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사례에 접목하여 물어본 바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법령의 경우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해당 물음의 사례와 관련된 법령만 서술하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할 때 보충송달의 법령을 서술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물음과 관련 없는 전자송달, 공시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등 전반적인 서류 송달의 방법을 모두 서술하는 경우에는 자칫 논점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점수와 상관 없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어 시간 배분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독사례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례와 관련된 필요한 법령을 서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단독사례형 문제의 경우 사례 적용을 한 줄 또는 두 줄에 걸쳐 너무 간단히 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례형 문제의 경우 사례적용은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걸쳐 물어본 바에 대해 충

분히 서술하는 것이 좋다. 다만 쓰는 답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다. OX문제가 아님을 주의해라.

**(2) 법령과 사례가 개별문항으로 분리된 문제**

법령과 사례가 개별문항으로 분리되는 문제유형이다. 위 (1)의 단독사례형과 달리 물음 1)에서 법령 내용을 묻고 물음 2)에서 사례적용능력을 검증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사례>

과세관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丙이 노원구 소재 주소지(이하 ‘이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한편 丙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 등기부상 미국주소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주미한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현주소 ‘미국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를 서술하시오. (5점)

물음 2) <사례>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5점)

	물음 1)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음 2)
1. 사례 판단
(1) 판례는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사유에 대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2) 주어진 사례의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근거로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인 점,
(3) 임야 등기부상 丙의 미국주소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국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결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

법령과 사례가 개별문항으로 분리된 문제 유형의 경우 물음 1)에서 묻는 법령은 점수에 맞춰 해당 법령을 서술하면 되고, 물음 2)의 사례 적용에 대한 물음은 물어본 바에 대해 해당 사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나 판례를 바탕으로 답하면 된다.

## II. 이론형 문제

최근 세법학은 응시생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이론형 문제는 여러 물음으로 나뉘어서 특정 법령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론형 문제는 물음 자체에서 소재목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재목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재목 등을 활용하여 물어본 법령에 대해서만 점수에 맞춰

서술하면 된다.

(1) 소재목을 물음에서 제시하는 경우

물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개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효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p>1.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개념</p>
	<p>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p>
	<p>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p>
	<p>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p>
	<p>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p>
	<p>(1)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의 사업장</p>
	<p>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p>
	<p>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따라서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등의 규정을 적용함</p>
	<p>에 있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사업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p>
	<p>발급하여야 한다.</p>
	<p>(2)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p>
	<p>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판매목적으로</p>
	<p>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3.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포기</p>
	<p>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p>

	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
	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
	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물음에서 서술의 범위를 제한하여 소재목을 준 경우라면 해당 소재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이런 이론형 문제의 경우 되도록 번호를 붙여가면서 서술하고, 소재목이 바뀌는 경우 또는 단락이 바뀌는 경우에는 한 줄 정도 띄어쓰는 방식으로 답안을 깔끔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 (2) 물음에서 소재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물음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1)
	I. 익금불산입액 및 외국자회사의 범위
	(I) 익금불산입액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 등은 제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액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95%

(2) 외국자회사의 범위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간주배당)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익금에 해당하는 배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금액
② 환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③ 위 ① 및 ②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4. 추계시 적용배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
	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음에서 소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법령에 대하여 서술하라는 식으로 출제된다면 위 답안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소제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좋다. 소제목 없이 또는 번호 등을 붙이지 않고 작성하게 된다면 읽어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소제목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소제목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서술되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 Ⅲ. 잘못된 답안작성 예시

다음은 수험생들의 답안 중 답안을 잘못 작성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 1. 점수에 상관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1) 5점짜리 문제를 1.5페이지 정도 작성하는 경우

<사례>

영리내국법인 甲주식회사(전자기기 판매업을 영위함, 사업연도는 1.1. ~ 12.31.)는 2015.10.10. 특수관계 있는 乙에게 A전자기기를 6억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별도로 甲은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는 해당 전자기기를 10억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乙에게 전자기기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21.5.1. 甲에 대하여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위 <사례>에서의 증액경정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5점)

I. 쟁점
<p>甲이 특수관계 있는 乙에게 다른 매수인보다 저가로 전자기기를 양도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p>
II. 관련 법령
1. 제척기간
<p>법인세는 다음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p>
<p>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p>
<p>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7년</p>
<p>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p>
2. 기산일
<p>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다.</p>
<p>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p>

	: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㉔ 종합부동산세·인지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Ⅲ. 판례의 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영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

	Ⅳ. 사례 적용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사례처럼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또한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례의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V. 결어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위 답안의 경우 답안 자체는 정말 잘 작성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제의 물음은 5점짜리이다. 따라서 반페이지나 반페이지가 조금 넘는 범위에서 서술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 반 정도를 작성한다면 해당 물음에 대한 점수 자체는 높겠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 않게 된다. 즉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IV(사례적용)와 V(결어)의 내용만 서술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2) 10점짜리 문제를 2~3줄 작성하는 경우

<사례는 위 (1)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물음 1) 위 <사례>에서의 증액경정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물음 1)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례의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위 (1)의 사례와 물음이 만약 10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다면 관련 법령 등도 언급이 되면서 1페이지나 1페이지 반 정도 분량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0점이나 그 이상의 물음의 답안을 사례형 문제의 경우 답만 2~3줄 정도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점수가 출제자의 간접적인 의도, 즉 서술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 비중이 높았다면 너무 간략히 서술하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없다.

## 2. 소재목이나 번호 없이 서술하는 경우

물음 1) 지방세법 중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서술하시오. (10점)

	물음 1)
	<p>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p>

위 답안작성의 예시의 경우, 내용 자체는 물어본 바에 대해서 잘 서술이 되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과 관련하여 소제목 등이 명시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채점자가 다 읽어보아야 한다(사실 읽어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음). 현실적으로 수천 명의 응시생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모든 답안을 일일이 읽어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제목을 명시해 주는 방법으로 어떤 내용이 서술이 되었는지 빠르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답안을 꼼꼼히 읽어보게 된다면 사실 표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사례의 문제의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등 감점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제목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점할 수 있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설령 다소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 등을 붙여서 서술하는 것이 좋다.

### 3. 물어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사례형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세법학의 경우 어렵게 출제될 때가 있고, 어렵게 출제된 문제의 경우 쟁점을 명확히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물어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바가 아닌 다른 내용이 서술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의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를 묻고 있는데 증여후양도행위 부인 규정을 서술한다면 점수를 사실상 받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물어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 IV. 세법학 문제 풀이 방법

### 1. 모든 문제는 풀려고 시도할 것

세법학은 되도록 모든 문제를 빠짐 없이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점 만점의 문제 중 1점에서 4점 정도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논제라고 할지라도 사실관계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서 답안을 조금이라도 작성해야 한다.

### 2. 시간 배분에 주의할 것

20점 배점의 문제의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며, 30점 배점의 문제의 경우에는 20분에서 25분 안에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중간 중간에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어느 한 문제에 시간을 너무 배분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는 논제가 출제된 경우에 해당 문제의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답안을 작성한다면 다른 문제(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 등)를 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3. 점수에 맞춰 답안을 작성할 것

보통 10점당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띄어쓰기 포함)를 작성하면 된다.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량을 작성하면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량이 적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점수에 출제자의 간접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확인하고 해당 점수에 맞춰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다만, 20점짜리 물음임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점수가 10점 이상이라면 양식을 갖춰서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10점 미만(또는 이하)의 점수라면 물어본 바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된다.

### 4.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것

사례형 문제의 경우 물어본 바와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거나 특히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다면 논점을 이탈한 것으로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는 물음을 정확히 읽어보고 물어본 바를 바탕으로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물어본 바를 정확히 인지했고 그것에 대해서만 답하겠다는 식으로 서술하여야 된다.

### 5. 소제목이나 결론의 글씨는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게 서술할 것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글씨를 깔끔하게 보기 좋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글씨를 지금 시점에 교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소제목과 결론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 숫자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이 깔끔하고 정리가 된 느낌이 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제목을 서술한 후 소제목이 바뀔 때 혹은 단락이 바뀔 때는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답안이 깔끔하게 보인다.

### 6. 물음이 몇 개인지 물어본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고 서술할 것

하나의 물음에서 간혹 두 가지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례를 준 후 해당 사례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만 서술하거나 재산세만 서술한다면 점수의 50%는 감점이 된다. 따라서 물어본 물음이 몇 개인지 잘 체크하여 그에 맞춰 소제목을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7. 사례형 문제의 경우 모르는 논제가 나와도 아는 지식을 활용할 것

보통 지식은 충분하다. 다만, 해당 지식을 문제에 적용(활용)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식을 답안에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모르는 논제가 출제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